



국제질서의 전환기, 유엔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다시 묻다

안보, 인권, 인도주의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

일시: 2026 년 6 월 29 일(월) 16:10-18:30

장소: 고려대학교 정경관 619 호

주최: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사회: 이신화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

1. 회의 취지와 개요

오늘날 국제사회는 단순한 강대국 경쟁을 넘어 기후위기, 경제 불안정, 불평등, 감염병, 강제이주, 인도주의 위기가 중첩되는 복합위기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동시에 지정학적 대립과 무력분쟁이 확산되고 공적개발원조와 국제기구 재원이 축소되면서, 유엔과 전후 다자주의 체제의 역할과 지속가능성도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관심과 자원이 군사안보와 전략경쟁에 집중되면서 인권, 인도주의, 국제법,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협력은 상대적으로 주변화되고 있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가 아니다. 북핵과 군사적 역지의 문제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 인도적 상황, 강제이주, 국제제재, 개발과 평화구축의 문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유엔 중심 다자체제는 현재 어떤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가? 둘째, 안보·인권·인도주의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한반도의 복합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 셋째, 기존 질서의 리더십과 재정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중견국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가?

회의는 전직 외교관과 유엔 인권·인도주의 분야의 현직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과 제도적 관점을 공유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이를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 외교의 과제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2. 프로그램

16:10–16:30 | 등록 및 다과

16:30–16:35 | 개회 및 회의 취지

- **이신화**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

16:35–17:10 | 세션 I.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과제

- **신각수** NEAR 재단 부이사장; 전 외교부 차관, 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전 주일대사, 전 주이스라엘대사

「국제질서 전환기 북한 복합위기와 다자외교의 과제」

- **안영집**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전 주싱가포르대사, 전 주그리스대사, 전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외교: 유엔 다자외교와 싱가포르 북미협상 현장에서의 경험」

17:10-17:45 | 세션 II. 보편적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의 시대

- **서창록**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전 한국인권학회 회장

「전환기 국제질서와 유엔 인권체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편적 보호를 중심으로」

- **김세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 전 유니세프 중국 대표부 공공협력 부문 선임자문관

「글로벌 동향 및 유엔난민기구의 대응 활동」

17:45-18:30 | 종합토론

- **김현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학과장
- **이신화**,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
- 발제자 및 전체 참석자

3. 핵심 논의 요약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문제의식이 확인되었다.

첫째, 현재의 위기는 국제질서 전체가 일시에 붕괴하는 현상이라기보다, 안보·통상·인권·인도주의 등 영역별 질서의 작동 능력이 서로 다른 속도로 약화되고 재편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유엔과 국제기구의 위기는 규범의 정당성 상실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인권과 인도주의 규범은 오랜 기간 축적되어 상당한 사회적·법적 기반을 확보했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국제기구의 재정과 인력, 정치적 지원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셋째, 최고지도자 간 양자 담판은 단기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만, 신고·검증·이행·재원조달과 같은 지속가능한 합의를 위해서는 결국 다자적 제도와 전문기구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은 다자체제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중견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외교적 수사에 비해 예산, 전문인력, 정책적 지속성, 위험 부담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자기비판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한반도 문제는 군사안보만으로 접근할 수 없다. 북핵 억지, 국제제재, 북한인권, 인도적 지원, 강제이주, 개발과 평화구축을 함께 다루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4. 세션 I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과제

4.1 신각수: 국제질서 전환기 북한 복합위기와 다자외교의 과제

신각수 부이사장은 2020년대 국제질서를 탈냉전 이후의 안정적 질서가 종료되고 새로운 규칙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과도기적 혼돈의 시대로 진단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압도적 우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협력,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유엔 인권제도 개혁, 평화구축위원회와 보호책임 원칙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구조적 조건이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치면서 탈냉전 질서는 사실상 종료되었고,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약화와 권위주의 국가 간 연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발제의 핵심 진단이었다.

특히 기존에는 강대국도 국제법을 위반할 때 최소한 법적·도덕적 정당화를 시도했지만, 최근에는 국제규범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거나 규범 위반을 정당화할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태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규범 위반을 넘어 국제법과 다자주의의 권위가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유엔과 국제기구의 핵심 자원 제공국들이 지원을 축소하고 중견국들조차 충분히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국제기구의 실질적 집행 능력도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법과 다자주의의 완전한 소멸을 전제하는 비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주의가 작동하고 국가들이 공동의 규칙에서 실질적 편익을 얻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규범 준수의 유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과제로는 민주주의 국가군과 권위주의 국가군 사이의 전면적 대결과 충돌을 피하면서 최소한의 잠정적 공존 방식을 형성하고, 중견국들이 연대하여 강대국 정치의 수동적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역시 단기적 현안 대응에 머물지 않고 향후 수년과 2030년대 초반까지를 고려한 중장기 다자외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메시지

- 탈냉전 질서는 사실상 종료되었으나 이를 대체할 안정적 질서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 다자주의의 위기는 미국 리더십의 약화, 권위주의 연대, 국제기구 재정 축소가 결합한 결과다.
- 중견국 연대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시도하지 않을 경우 강대국 정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 한국은 외교적 선언을 넘어 자원과 역량을 갖춘 중장기 다자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4.2 안영집: 유엔 다자외교와 싱가포르 북미협상 현장의 경험

안영집 부회장은 제네바 다자외교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다자외교와 양자외교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제네바의 국제기구들은 다자협력의 중심이지만, 컨센서스 의사결정과 국가 간 진영 대립으로 인해 소수 국가가 전체 논의를 장기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군축회의, 인권이사회, 핵비확산체제, 세계무역기구 등의

사례는 다자제도가 높은 정당성을 보유하더라도 실질적 실행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과 비확산 문제 역시 보편적 원칙보다는 국가의 진영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핵보유국과 비핵국 사이의 의무 불균형, 인권 문제에 대한 선택적 비판, WTO 분쟁해결 체제의 마비는 기존 다자체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최고지도자 간 톱다운 방식이 지닌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었다. 정상 간 직접 담판은 교착상태를 빠르게 돌파할 수 있지만, 충분한 실무협상과 제도적 준비가 없으면 합의가 원론적 선언에 머물고 후속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신고, 검증, 이행시간표, 제재 조정, 핵확산금지조약 복귀와 같은 비핵화의 핵심 단계는 정상 간 정치적 합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안보리, 국제원자력기구, 관련 당사국, 전문기구가 참여하는 다자적 이행체제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양자외교와 다자외교를 대립적인 선택지로 볼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돌파는 양자협상을 통해 추진하더라도 합의의 구체화와 이행은 다자제도로 보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과 같은 지역 다자채널 역시 결정적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하더라도, 공식 양자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대화를 지속하고 비공식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보완적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핵심 메시지

- 다자제도는 정당성이 높지만 컨센서스 구조와 정치화로 인해 실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
- 정상 간 톱다운 외교는 돌파구를 열 수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합의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
- 북핵 문제의 최종 해결과 검증·이행에는 다자적 제도와 전문기구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 양자외교와 다자외교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단계별로 결합되어야 한다.
- 아세안 등 지역 다자채널은 대화가 단절될 때 외교적 완충지대가 될 수 있다.

5. 세션 II 보편적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의 시대

5.1 서창록: 전환기 국제질서와 유엔 인권체제

서창록 교수는 유엔 인권체제, 특히 독립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조약기구가 정치적 위기와 재정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심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약화되고 있지만,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축적된 국제인권 규범의 정당성과 사회적 기반까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생명권, 여성인권, 장애인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법적 기준은 오랜 기간 제도화되어 쉽게 되돌리기 어렵다.

그러나 규범을 실제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인권조약기구의 재정 기반은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 회의 횟수 감소, 심의 적체, 인력 부족은 조약기구의 기능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규범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적용할 제도적 역량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유엔 인권체제는 국가 대표들로 구성되어 정치적 성격이 강한 헌장기구와, 개별 조약에 근거한 독립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을 축적하는 조약기구로 구분된다. 그러나 가시성이 높은 정치적 기구에 비해 조약기구는 제한된 재정만을 배정받고 있으며, 정규분담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관행도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중립성을 이유로 자발적 기여를 제한하는 기존 원칙이 실제로 조약기구의 독립성을 보호하는지, 아니면 필요한 재원을 차단하여 제도 자체를 약화시키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한국은 유엔 인권체제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제도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교적 적은 자원으로도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 외교정책과 재정적 기여로 연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핵심 메시지

-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와 국제인권 규범의 소멸은 구분해야 한다.
- 인권규범의 정당성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과 집행 역량의 붕괴다.
-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새로운 재정모델이 필요하다.

- 한국은 제한된 재원으로도 의미 있는 인권 다자외교를 수행할 수 있으나 정치적 의지와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5.2 김세려: 글로벌 강제실향 위기와 UNHCR의 대응

김세려 대표는 강제실향 문제가 단순한 인도주의 사안을 넘어 국제평화, 안보, 경제, 개발이 결합된 장기적 글로벌 위기라고 강조했다.

난민과 국내실향민은 경제적 선택에 따라 이동한 일반 이주민과 달리 박해, 분쟁, 폭력, 인권침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다수는 선진국이 아니라 분쟁지역 인근의 저소득·중소득 국가에 머물고 있어, 가장 취약한 국가가 가장 큰 보호 부담을 지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강제실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단기적 식량과 주거 지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난민의 교육, 고용, 경제적 자립과 수용국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지원하는 중장기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요 공여국의 지원 축소와 지정기여금 확대는 UNHCR의 자율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약하고 있다. 대규모 인력 감축과 사업 축소가 진행되면서 식량배급과 법적 보호 등 핵심적인 현장 서비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UNHCR은 긴급구호 중심의 접근에서 난민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접근으로 전환하고자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도주의 기구만이 아니라 개발기구, 공여국, 지방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난민 지원은 먼 지역의 자선 문제가 아니라 분쟁 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적 취약성, 초국경 이동을 완화하는 투자이며, 한국의 장기적 안보와 국제적 위상에도 관련된 문제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핵심 메시지

- 강제실향은 인권·인도주의뿐 아니라 평화·안보·개발의 문제다.
-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난민 보호의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다.
- 국제사회의 원조 축소는 식량, 보호, 교육, 인력 등 현장 대응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 긴급구호와 함께 난민의 자립과 수용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 한국의 인도주의 기여는 도덕적 책임인 동시에 국제안보와 안정에 대한 전략적 투자다.

6. 종합토론의 주요 쟁점

6.1 국제질서는 단일하게 붕괴하는가

김헌준 교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하나의 단일한 구조로 이해하는 관점의 한계를 지적했다. 실제 국제질서는 안보, 통상, 환경, 인권, 인도주의 등 여러 영역별 질서가 중첩된 구조이며, 각각의 제도적 회복력과 붕괴 속도도 다르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주권, 안보, 강대국 정치가 인권과 국제규범보다 우위에 서는 후퇴가 분명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시민사회, 지역기구, 국제기구, 법률가와 비국가 행위자가 기존 규범과 제도적 관성을 활용해 새로운 대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는 현 위기를 전면적 종말로 단정하기보다 어떤 영역이 유지되고, 어떤 영역이 약화되며, 어디에서 새로운 행위자와 제도가 등장하는지를 구분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6.2 국제기구 재정위기와 중립성의 딜레마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인도주의 기구가 겪는 재정위기는 이번 회의의 핵심 공통 주제였다.

특정 국가의 자발적 기여에 의존하면 기구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그러나 정규분담금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발적 기여까지 제한하면, 중립성을 지키려다 제도 자체가 작동하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따라서 자원 출처의 다변화, 기여금 사용의 투명성, 독립적 감독, 다년도 재정계획 등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6.3 북핵 문제: 정치적 합의와 제도적 이행의 결합

북핵 문제에서는 양자 정상외교의 정치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완결된 해결방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국가 간 또는 정상 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핵시설 신고, 검증, 폐기, 제재 완화, 안전보장, 경제지원과 국제규범 복귀는 다수 국가와 국제기구의 참여 없이는 이행하기 어렵다.

한국은 북미 간 담판이 있게 될 경우 그 결과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 합의의 조건과 이행구조를 사전에 준비하고 다자적 검증과 협의 장치를 설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6.4 한국의 중견국 역할: 기대와 역량의 격차

참석자들은 한국이 경제력, 민주주의 경험, 국제기구 인력,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다자체제의 공백을 보완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의 실제 예산과 인력은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다자외교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소규모 국제회의나 인권기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은 외교적 수사와 정책수단 간 격차를 보여준다.

중견국 외교는 국제회의 참석이나 공동성명 참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재정적 기여, 전문인력 양성, 의제 설정, 제도 운영, 장기적 정책 지속성이 함께 요구된다.

6.5 한국 다자외교의 의제 편중

한국 대표단이 국제회의에서 북핵 관련 문구를 결과문서에 반영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기후, 인권, 개발, 난민, 보건, 군축 등 다른 다자 의제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부족했다는 자기비판도 제기되었다.

북핵 문제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이 중시하는 글로벌 의제에도 구체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은 한반도 현안을 국제무대에 제기하는 국가를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재원을 제공하는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

6.6 국제기구 진출과 차세대 전문인력

최근 한국 청년층의 국제기구 진출 관심이 감소한 현상도 논의되었다.

일부 참석자는 이를 국제기구의 위상 약화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높은 생활수준, 국내 전문직 선호, 국제적 공익 활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보상과 연결해 설명했다.

반면 국제기구 현장에서는 출신 학교보다 보건, 영양, 상하수도, 난민법, 통계, 기술 등 구체적 전문성과 공공적 목적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국제기구 진출 지원은 일반적인 국제관계 교육보다 분야별 전문성, 현장 경험, 언어능력, 장기적 경력경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6.7 인권과 이행기정의의 정치화

인권과 이행기정의의 정치화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인권과 정의는 권력, 책임, 피해자 인정, 자원 배분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치적 논쟁을 수반한다. 따라서 목표는 정치화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 이용을 줄이고 인간 존엄과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동의하는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어야 한다.

북한인권과 과거사 문제 역시 특정 진영의 독점적 의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간 존엄의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시민사회, 차세대 연구자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7. 종합평가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유엔과 다자주의의 위기를 단순히 국제기구의 비효율이나 강대국 경쟁의 결과로 환원하지 않고, **규범·정치적 리더십·재정·집행 역량이 동시에 분리되고 약화되는 복합적 위기**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의에서 도출된 가장 중요한 분석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규범과 국제기구를 구분해야 한다. 인권과 인도주의 규범의 정당성은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지만, 이를 구현하는 기구의 재정과 집행 능력이 붕괴할 수 있다. 규범의 생존만을 근거로 제도의 회복력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

둘째, 양자외교와 다자외교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양자외교는 정치적 돌파에 유리하고, 다자외교는 합의의 정당성, 전문성, 검증, 이행, 자원조달에 필수적이다. 북핵 문제에서도 두 접근을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인권과 인도주의는 안보의 주변 의제가 아니다. 난민, 강제실향, 인권침해, 빈곤, 개발 실패는 분쟁의 결과인 동시에 새로운 불안정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 안보·인권·인도주의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전략이다.

넷째, 중견국 역할은 선언이 아니라 능력의 문제다. 한국이 다자체제의 공백을 보완하려면 외교예산, 국제기구 기여, 전문인력, 의제별 역량, 정책 지속성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 다자외교는 한반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한국이 인권, 난민, 보건, 기후, 개발, 군축 등 다른 국가들이 직면한 공동문제에 기여할 때,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신뢰도 함께 강화될 수 있다.

8. 주요 정책적 시사점

1) 안보·인권·인도주의를 연결하는 한반도 전략 수립

북핵 억지와 비핵화 협상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 인도적 지원, 강제송환, 개발과 평화구축을 하나의 복합위기 전략 안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2) 양자 합의를 뒷받침할 다자적 이행체제 준비

향후 북미 또는 남북 간 정치적 합의가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 검증, 제재 조정, 안전보장, 경제지원과 국제기구 참여 방안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

3) 한국의 선택적 국제기구 리더십 확대

모든 국제기구에 동일하게 자원을 분산하기보다 한국이 비교우위와 전문성을 가진 인권조약기구, 난민·인도주의, 보건, 개발 분야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4) 다자외교 예산과 전문인력의 제도적 확충

중견국 외교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을 정부 전체 외교전략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 단기 사업비뿐 아니라 다년도 기여, 전문가 파견, 국제기구 진출, 연구와 정책 네트워크 지원이 필요하다.

5) 국제기구 재정의 다변화와 투명성 강화

정규분담금과 자발적 기여금 사이의 이분법을 넘어 다년도 공동기금, 복수 공여국 기금, 독립적 감독, 투명한 사업평가 등 중립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6) 차세대 국제기구 전문인력 양성

일반적 국제관계 지식뿐 아니라 인권법, 보건, 영양, 수자원, 공학, 통계, 데이터, 사이버, 기후 등 분야별 전문성과 국제 현장 경험을 결합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7) 한국 다자외교 의제의 확장

국제회의에서 북핵 문구 확보에 집중하는 관행을 넘어 글로벌 공공재와 국제규범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기여가 축적될 때 한국의 한반도 관련 제안도 더 큰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9. 결론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엔과 다자체제의 위기가 한반도 문제와 분리된 외부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강대국 경쟁의 심화, 국제법과 규범의 약화, 국제기구 재정 축소, 난민과 인도주의 위기의 장기화는 북한 문제와 한국 외교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를 군사안보의 부차적 의제로 취급하는 접근 역시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한국의 과제는 약화되는 기존 질서의 단순한 수혜자로 남거나 과거 질서의 복원을 기다리는 데 있지 않다. 한국이 보유한 경제력, 민주적 경험, 개발 역량, 국제기구 전문성을 구체적인 재정과 정책으로 전환하여 다자체제의 공백을 선택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중견국 역할은 더 많은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규범을 지탱할 자원과 전문성을 제공하고, 정치적 합의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연결하며, 안보·인권·인도주의를 통합한 협력의 틀을 설계하는 능력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작성

안중언, 서윤겸